

# 수소연료전지 제조공장 증설

도·익산시, 두산퓨얼셀과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내 설립  
행·재정적 지원 협조 약속



전북도와 익산시가 21일 익산시청에서 두산퓨얼셀과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21일 익산시청에서 두산퓨얼셀과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산퓨얼셀(주)은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내 기존 부지(28,452㎡)에 1,100억원을 투자해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도와 익산시는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두산퓨얼셀(주)은 수소연료전지의 판매 물량 증가 전망에 따라 적기 대응을 위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오는 7월 착공한다.

이번 투자로 86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되고, 총 231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2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두산퓨얼셀(주)은 밝혔다.

두산퓨얼셀(주)이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발전과 활용돼 발전시 생산되는 열과 CO2를 유리온실 등에 제공할 수 있어 스마트팜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바, 향후 새만금 농업용지에 조성 예정인 시설농업과 연계 발전이 기대된다.

두산퓨얼셀(주)은 지난 2019년 10월 (주)두산의 연료전지 사업부문을 분할해 설립된 기업으로 익산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다.

연료전지는 발전 효율이 높고, 안정성이 우수하며, 분산 발전이 가능한 친환경 발전원이며,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연료전지 시장 및 산업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유수경 두산퓨얼셀(주) 대표이사는 "전북도와 익산시의 노력으로 증설투

자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투자로 전북도와 익산시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최적의 에너지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친환경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두산퓨얼셀(주)이 익산에 추가 투자해 익산의 첨단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친환경 솔루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두산퓨얼셀(주)이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성장해 연료전지 관련 분야의 세계 일류기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국가보훈대상자 진료·약제비 확대 필요”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임시회사 건의문 채택  
농림수산업자 신보금  
정부출연금 지속 확대도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21일 충북 청주에서 협의회 2021년 제5차 임시회를 열고 한지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비와 약제비 등 의료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며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정부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도 건의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21일 충북 청주에서 협의회 2021년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과 '농림수산업자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활성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과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병원 진료에는 약제비용이 감면되지 않아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구·광

주·인천·대전 등 전국 6개소에 그쳐 의료편의 제공을 위해 위탁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송 의장은 "국가보훈기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해야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훈대상자의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의 전액 면제는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정부출연금 중단과 환수에 따라 보증 중단이 우려된다고, 정부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송 의장은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기금이 안정화했다는 이유로 신규출연을 중단했고, 2014년부터는 기존 출연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다"며 "기금 잔액 대비 보증잔액을 나타내는 운용배수가 2019년 이미 적정수준(12.5배)을 초과했으며, 올해는 신규보증 중단기준인 20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금 보증중단은 농업분야 자금경색으로 이어져 국내 농업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실제로 지난해 대출연장조건을 까다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두 건의 문을 관련 부처와 국회 등지에 보낼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혁신학교, 공교육 강화 방향으로 발전해야”

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결산 심사 마무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2)는 21일 2020회계연도 전북도 및 도교육청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도내 혁신학교는 교육감이 지정해 도내 180여개 운영 중인데,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대안이 아닌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과의 협력을 구축 중인데, 교육청의 일방적인 혁신 교육 방향 제시가 아닌 14개 지자체의 지역별 특성 및 지향 목적에 맞게 '혁신학교' 및 '시립형 대안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8)은 "교장공제제 현황을 질의하고, 제도실시의 목적은 교육의 변화 미시스터디 등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함이다"면서 "학교에서 교원들의 반발이

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모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토론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교육청의 성인자사업 성과목표 중 화장실 개선 관련 사업 중 여자 화장실 대변기 설치 목표가 42%를 달성한 것으로 돼 있으나, 전년 실적(47.1%)보다 낮다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과 목표설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관련 부담금 12억 원을 납부 중인데, 현재 장애인고용고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도내 장애인학교 등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교원 승진 인사 관련해 '교장 승진' 인사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가 의무가 아닌데, '교감 승진'은 다른 지역으로 전보 발령이 의무인 이유를 질의하고, 학교 운영위원(교원, 학부모, 지역위원) 제척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유호상 기자

김만기 예결특위 위원장  
“지역사회 공헌 폐교 활용을”



21일 전북도의회 3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전북도교육청 결산심사 정책질의에서 김만기 전 전북도의회 예결위원장은 "폐교관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를 도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매각·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에서 현재 관리하는 폐교 40개 중 24개를 자체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이용상태를 점검해보니 건물 상태가 위험한 흉물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에서 현재의 자체활용 폐교관리 원칙을 대부분 임대로 변경해 폐교관리에 드는 예산절약, 매각이나 임대 등으로 인한 세입증대 등으로 적극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호상 기자

# 전주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

## “폐기물처리시설 책임 있는 계획 나와야”

허옥희 시의원, “플라즈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만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해결책 아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전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묻는 요구가 21일 전주시의회 38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나왔다. 현재 전주권소각자원센터의 소각시설 이전과 환경부 허가 신청 후 반년이 지나도록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플라즈마 소각시설 시범사업'에 대한 지적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허옥희(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에게 따르면 전주시는 인근 원주와 김제, 임실의 생활폐기물까지 소각하는 하루 400톤 처리 규모의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 시설에 따른 간접영향구역으로 지정된 삼천동 삼산마을에는 시에서 연간 6억원의 주민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종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간접영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4개 마을 주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점을 들어 소각장 운영 중단과 이전 설치를

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허 의원은 이런 문제와 함께 현재 소각시설의 운영 연한이 2026년 9월로 불과 5년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또 현재 소각시설이 운영되기까지 6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던 점을 주지시키며, 시간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시는 플라즈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만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해결책만 기대하고 있다"면서 "2026년 이후의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시범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뚜렷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시인의 시급한 문제를 내세워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 11월 환경부 허가 신청 후 6개월째 담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의지의 반반이라도 시범사업의 계획과 검토를 위해 썼다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며 소각시설 이전 설치 요구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행정계획 공개를 촉구했다.

## “건지산 일대, 전주 북부권 대표 관광지로”

강승원 시의원, “숙박시설 유치 등 필요”



전주동물원과 건지산 일대에 관광과 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전주동물원의 변화를 계기로 건지산 일대에 각종 시설을 확충, 북부권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자는 얘기다.

21일 전주시의회 강승원(더불어민주당, 덕진·팔복·조촌·여의동) 의원은 제38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사회 공공 기능적 측면에서 건지산 일대의 역할 강화와 전주관광의 외연확장 등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극심한 교통체증현상을 빚고 있는 건지산로와 소리로 조정 단로를 6차선으로 확충하고, 드림랜드 쪽 동물원 후문과 주차장 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덕진체련공원 주변의 장기미조성 도시공원 부지를 활용한 청소년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 유치로 체험형 관광을 유도하고 어린이 체험시설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관광의 외연확장 등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극심한 교통체증현상을 빚고 있는 건지산로와 소리로 조정 단로를 6차선으로 확충하고, 드림랜드 쪽 동물원 후문과 주차장 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덕진체련공원 주변의 장기미조성 도시공원 부지를 활용한 청소년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 유치로 체험형 관광을 유도하고 어린이 체험시설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日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전주시의회 “독도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전주시의회가 21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승진(더민주,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3명 의원이 전원 동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물문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본올림픽조직위가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침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또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평창올림픽 당시 스포츠와 정치적



사안 연결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한반도간의 독도 표시 삭제를 권고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며 "일관성 있는 IOC의 정치적 중립과 이번 불거진 독도 관련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올림픽의 기원을 일본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며 전주시의회는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 결연한 의지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공명정대한 세상 바라기

공명포럼, 오늘 정식 출범

'공명포럼'이 22일 오전 11시 여의도 글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은.오프라인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공명포럼'은 적극적인 정치참여, 공감대 확산을 통한 공정한 세상,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내·외 15만여 명의 발기인이 뜻을 모아 출범한다.

'공명포럼'은 국내외를 아우르는 조직을 갖춰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럼 구성은 17개 권역, 14개 직능, 36개 위원회와 해외본부(30개국 100개 도시) 등 각계각층이 어울려 구성돼 있다. 이종걸 전 국회의원, 황석영 소설가가 상임고문을, 안민석·정성호·김윤덕 의원이 상임공동대표를, 김남국·문정복·민형배·박성준·이동주·홍정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또한 포럼의 고문으로는 이철취 전 육군대장, 남중용 전국국립대학교총장, 노동조위원장, 방기흥 한국중소상인 지역업자총연합회 회장, 장만채 전 전 남교육감, 전순욱 소상공인연구원이사장, 김기준 전 경기도경제과혁신지원장이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조연설과 함께 공식행사, 정책 토론회 등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오마이뉴스TV 유튜브 채널 (youtube.com/OhmynewsTV)을 통해 라이브 중계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대동세상연구회 전북본부 출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대동세상연구회 전라북도 지역본부가 지난 19일 익산 스포츠문화체육관에서 여대명(원광대 교수) 고문의 개회선언으로 출범했다.

이 지사 지지를 표방한 대동세상연구회는 이규민(안성시) 국회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전북지역본부는 이명기(전 호원대교수) 대변국과 대표 코치·감독) 상임본부장, 이승규(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신성욱 전 대통령직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위원, 서종수(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사무위원)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최연복(국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명기 상임대표는 "불공평함과 불합리의 고리에서 벗어나 함께 더불어 살기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 공정한 대한민국 평화와 공영의 한반도에 주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유호상 기자

# 소방차 진입근로자 진입로 확보

민주한병도 의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 의원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투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 불법 주차·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능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소방기법' 개정을 통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사장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호상 기자